

“고용허가제 도입 출입국심사 강화해야” 정부 개선책은 불법체류 더 확대시킬것

전북대 설동훈교수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 대책은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는 커녕 인권침해 시비와 불법체류 문제를 확대시킨 졸속 정책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내놓은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에 대해 전북대 정치사회학과 설동훈(37·사진) 교수는 이같이 평가했다. 노동문제와 사회구조를 연구해 온 설 교수는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이번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근로자의 고용조건, 기본권과 관련해 아무런 개선책도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설 교수는 “현재 시급한 일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정비,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립하는 일인데 오히려 재외동포에게만 고용허가제를 허용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만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 교수는 오점 투성이인 이같은 정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정부부처간의 나눠먹기와 떠넘기기식 태도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 등은 산업연수생들이 체류기간을 초과할 경우 모두 불법체류자로 추방하겠다고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설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문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불법체류 문제를 줄여나가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경원기자 bkyoon@sgt.co.kr